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2권 제1호
2021 Vol. 2, No. 1, 181 - 213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과 차기 후보 공약 제언
: 18, 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자료집을 중심으로

신우철*·김은총·이종승*****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선거 담론으로 장애인 의제가 출현하였다. 선거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치열한 공약 경쟁과 정당의 이념 경쟁을 통해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는 공약 정책 양상은 어떠한가?”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18, 19대 대통령선거의 장애인 공약 양상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하나인 토픽 모델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장애인’은 ‘소수자’로 일컫는 취약계층 공약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밝혔으며, 장애인 공약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었다. 이후 전체 공약집 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빈도 단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18대에서 22위, 19대에서 39위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19대 선거에서 그 수치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짧은 검증 기간’, ‘집권 여당 심판론’ 등으로 인해 표를 획득할 수 있는 ‘절대다수를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는 선거 전략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거 공약집 양의 차이에 따라 토픽의 개수(K)를 달리 설정하여 구체적인 주제명을 설정하였으며 당선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20대 대통령선거 중 논의 될 장애인 정책 의제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융합한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이념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 부문에서 득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 간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재무금융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학과, 석사

질적인 문제 해결 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토픽모델링, 대통령선거, 공약, 동향, 장애인 담론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선거 공약 담론 분석은 후보자 간 언론 보도와 공약집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후보자 간 비교, 다중 비교 공약 담론 분석을 통해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담론을 둘러싼 이익집단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로 활용해 온 문헌 연구는 공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 적절한 분석 틀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연구자 의존도가 높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도 있었다(이수경 외, 2011). 특히, 대통령선거는 각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성을 띄어 이에 맞는 공약 수립이 이루어져, 명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텍스트와 음성, 영상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선거에서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자료집이다. 많게는 400쪽에 달하는 후보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시야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선거 공약이 수립되어 온 동향과 2022년 3월 치러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통령 공약과 장애인 정책 수립' 의제를 살펴보고자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빅데이터 방법론 분석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장애인 의제(Agenda)[1]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후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김윤자, 2021). 이 법령의 기원을 살펴보면 1988년 최초의 장애인 대중집회라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규탄 대회'의 개최(유동철, 2005)라 할 수 있다. 이 집회에서는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무함을 짚었다. 또한, 생존법,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많은 노력으로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며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발맞춰 90년대 중 후반부터 대통령 후보자도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대기업 취업 의무제'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장애우연금제', '장애우정책 총괄 대통령직속 국가조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처럼 민의를 반영하는 공약은 지속해서 발전해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이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2]로 흘러가고 있는데,

---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공식적인 정책 문제
2)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와 국회 구성을 하는 간접민주주의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정당-선거-의회를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대표체제다(박찬표, 2008).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대통령선거다. 특히, 선거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인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대의 흐름과 해당 이념을 가진 지지자들의 호응이 뒷받침하는 순간, 이는 당선으로 이어지고 공약은 살아있는 정책이 된다. 이에 전문가 집단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장애인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대통령 선거 공약 자료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 의제 설정과 형성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과 적절한 제언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는 공약 정책 양상은 어떠한가? 라는 거시적인 담론 아래, 18대, 19대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장애인 공약 양상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담론에 대한 이행도를 파악하고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담론은 무엇인지 예측해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장애인 정책 동향 파악과 수립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공약 대비 장애인 공약의 비중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정책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18,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공약 이행 수준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정책과 선거

선거 공약 장애인 정책 담론을 다룬 연구는 2007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한 '제17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정책 제안 및 정당별 공약 비교 분석 자료집'과 남찬섭이 월간 복지동향에 발간한 '장애인 :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 평가'가 있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007)의 자료의 경우 해당 단체 문의 결과 자료 원본이 유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공약을 비교하였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남찬섭(2007)의 경우 장애인 분야를 영역별로 나누어 공약 제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영역

은 크게 재정, 소득보장, 고용, 의료, 서비스, 보육·교육,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여성장애인의 8가지였으며 주요 후보 5인에 대하여 어떤 곳에 핵심 가치를 두고 공약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17대 대선 이후 장애인 정책 대선 담론 관련 연구는 진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18, 19대 대선을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에 관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한 결과, 16대 대통령선거부터 지역주의의 약화와 이념 갈등 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6대 대통령선거는 속칭 386세대로 불리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이념과 여러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강원택, 2005).

최준영·조진만(2005)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념 지향성 선택이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념지향 투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18대 대선 이후부터 각 후보의 공약 이념적 차이, 특히 장애인 분야의 공약은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와 다양한 기법(알고리즘)의 활용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종승(2021)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각 정권의 정책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행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분석에 활용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은 Blei et al.(2012)이 제안한 모형으로 문서 잠재 토픽 생성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확률적으로 관측된다고 가정한다(안예지, 2020). 즉, 글을 완성할 때, 특정 주제(topic)를 뽑을 확률과 그 주제(topic)에 맞는 단어(word)를 선택하는 행위가 조건부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제(topic)의 결합은 하나의 문서(document)가 되고 주제의 분포에 따라 문서의 단어 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이종승, 2021).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은 한 개의 문서(document)는 한 가지 주제(topic)만 가진다고 가정하는 기존의 유니그램 모형(unigram model)과 유니그램 혼합(mixture of unigrams) 모형과는 달리 한 개의 문서(document)에서 한 가지 이상의 주제(topic)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 모형 대비 실제 텍스트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김정수, 이석준 2016).

또한 유재호, 김하나, 전의찬(2021)은 진행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주는 해당 시점의 주요 이슈(issu

e)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한 정책에 대해 주제와 키워드 중심의 분석 방법이 현안 수립 결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음(significant)을 파악하였다.

정지원, 이재민, 최소연(2018)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장애인 노동의제를 분석하였다. 언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화 후 키워드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장애인 의제에 대한 보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 담론에 대한 대통령선거 공약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으로 분석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지식이 있는 연구자의 해석 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자료집을 분석하여 장애인 공약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림 3-1〉로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한다.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 주요 후보 선정 후[3] 정책 공약집 자료 수집

대선 회차	후보명	소속정당
18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데이터 전처리

토큰화 (tokenization)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remove stopwords)

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한 장애인 주요 공약, 정책 담론 분석

공약 이행 정도 분석

〈그림 3-1〉 연구 순서도

3) 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중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 5% 이상인 후보자”를 만족시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과정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은 Python 라이브러리인 KoNLPy, Gensim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우선 분석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노이즈(noise)를 최대한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큰화(tokenization) 과정과 불용어 제거 과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모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제(topic)별 단어(word)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topic)별 단어(word)를 통해 각 후보자 별 주요 공약과 정책 담론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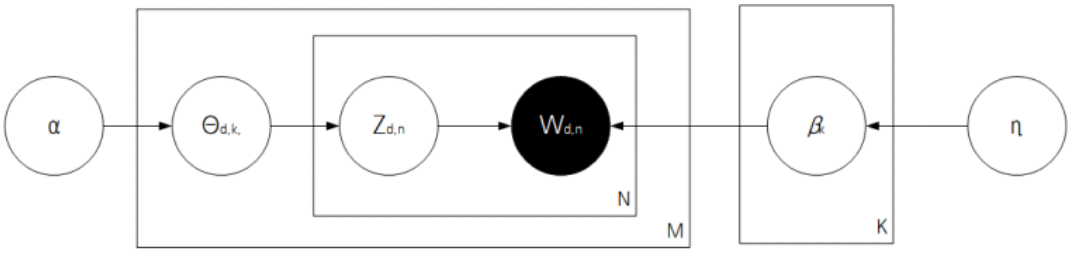
컴퓨터는 숫자 형태로 된 데이터(numeric data)만 인식할 수 있어 인간의 언어인 자연어(natural language)는 인식할 수 없다.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베딩(embedding) 과정을 통해 숫자 형태(numeric data)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된 공약자료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베딩(embedding)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임베딩(embedding) 과정과 이후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 과정에서 오차(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맞춤법 분석기를 통하여 오타를 수정한 후,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토큰화(tokenization)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KoNLPy 라이브러리와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 (OKT: Open-source Korean Text Processor)를 활용하였다.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OKT)를 활용한 형태소 분석은 사전에 학습된 형태소 분석 모형(model)을 활용하여 예측(prediction)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각 단어가 해당 단어의 품사와 함께 분할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결과 값이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김민호, 윤호열, 최상옥, 2020).

마지막으로 불용어(stopwords) 제거 과정을 거쳤다. 불용어(stopwords)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명사 단어들을 빈도 분석한 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공약집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단어인 '국가, 지원, 확대, 국민, 사회'등과, 장애인 공약 분석과 관련이 없는 '여러분, 약속' 등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 불용어(stopwords)라고 판단, 제거하였다.

2.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은 Blei et al.(2021)가 제안한 개념으로 문서 잠재 토픽 생성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확률적으로 관측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안예지, 2020).



〈그림 3-2〉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모형 (Blei, 2012)

〈그림 3-2〉에서 각 원은 확률 변수를 나타내며, 화살표의 방향은 확률 모형 내에서 상위 변수가 하위 변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W_{d,n}$은 관찰된 데이터로 d는 문서(document)를 나타내며 n은 단어(word)를 나타낸다. 또한 문서들이 K개의 주제(topic)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며, 주제(topic)의 사전 분포 모수는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α이며, 토픽의 단어 분포 확률은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β로 나타낸다. β_k는 문서 전체에 대한 디리클레 분포를 통해 할당되며, 상수 η는 β_k의 사전분포를 결정하는 모수이다. θ_k는 각 문서 d의 주제(topic) 구성 비율의 모수이며, $Z_{d,n}$는 문서 d에 등장하는 각 단어 n에 주제(topic)을 할당하는 모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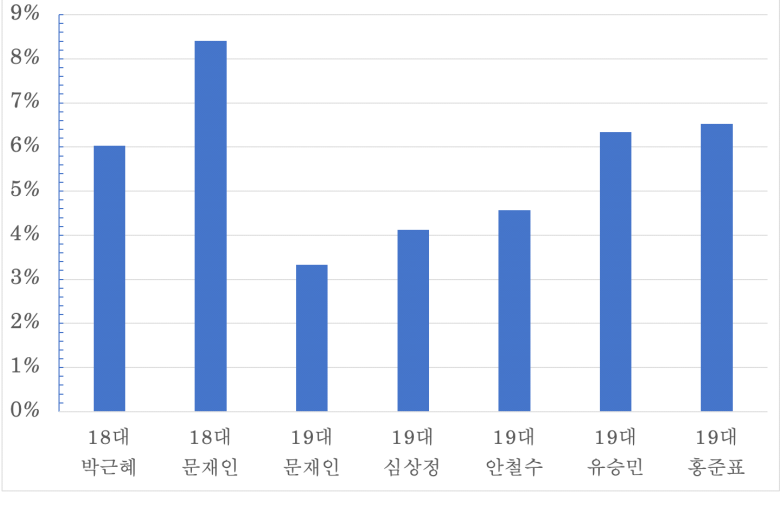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 베이즈 정리(Bayes'theorem)를 이용하여 문서(document)의 주제 분포에 대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근사 추론(approximate inference)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사 추론으로 Blei, Ng, & Jordan(2003)이 제안한 VEM(variational expectation-maximization)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모수화된(parameterized) 특정 분포를 미리 상정한 후 사후 분포에 가장 가까운 멤버를 찾는 결정론적 접근(deterministic)을 취한다. 즉, 상위 모수를 이미 안다고 전제하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의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θ_k와 β_k를 계산한 다음, 이 값을 이용해 다시 상위 모수 값을 추정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을 사용할경우 주제의 수(K)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perplexity 값을 기반으로 주제의 수를 5~10개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후 5~10개의 범위에서의 분석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제(topic)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주제(topic)의 수(K)를 6개 또는 7개로 결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공약 중 장애인 정책 중요도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자료집의 전체 공약 쪽수 대비 장애인 정책이 기록된 쪽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비율을 따져보았다. 목차 내 '장애인'으로 분류된 것과 '장애'로 검색된 페이지를 포함한 것을 수치화하여 계산하였으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근삿값을 사용해 시각화를 〈그림 4-1〉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4-1〉 공약자료집 내 장애인 공약의 비중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자는 전체 공약 381쪽 중 23쪽에 장애인 공약을 기재하였으며 수치는 약 6.03%였다. 문재인 후보자의 경우 297쪽 중 25쪽으로 약 8.41%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절대적인 쪽수로는 박근혜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자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비율 계산 특성상 전체 양이 많았던 박근혜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공약에 대한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

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문재인 후보자는 전체 공약 387쪽 중 13쪽으로 약 3.33%의 수치가 도출되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364쪽 중 15쪽으로 약 4.12%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350쪽 중 16쪽으로 약 4.57%, 유승민 후보는 331쪽 중 21쪽으로 약 6.34%, 홍준표 후보가 230쪽 중 15쪽으로 약 6.52%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VOICEYE voiceye.com

수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비 19대 대통령 거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할애 비중이 줄었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짧은 선거 홍보 기간에 장애인 공약을 비중을 두는 것보다 다 득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야 공약에 집중하였기에 장애인 공약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둘째,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소수자'로 일컫는 여러 취약계층 공약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공약이 대통령선거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 중 장애인 정책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해보았다.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이후 상위 빈도 20개를 나열하여 〈표 4-1〉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중 '장애인'이 상위 20개에 속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순위와 빈도수를 표시하였다.

〈표 4-1〉 18, 19대, 표본 전체(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18대		19대		표본 전체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지역	432	지역	648	지역	1080
2	교육	410	산업	616	교육	953
3	일자리	377	교육	543	산업	947
4	문화	344	도입	522	문화	740
5	산업	331	보장	417	일자리	675
6	체계	280	문화	396	체계	654
7	고용	272	체계	374	보장	644
8	개정	270	노동	371	고용	594
9	서비스	263	안전	363	개정	593
10	복지	257	개정	323	서비스	567
11	보장	227	고용	322	복지	523
12	도입	225	환경	319	환경	523
13	보호	224	기업	305	안전	515
14	경제	220	서비스	304	기업	502
15	소득	217	청년	299	소득	499
16	중소기업	212	일자리	298	보호	485
17	육성	211	기술	286	경제	482
18	환경	204	소득	282	보험	466
19	보험	203	기준	280	육성	442
20	기업	197	위원회	278	청년	432
	(22) 장애인	187	(39) 장애인	231	(28) 장애인	418

18대 선거는 22위, 19대 선거는 39위에 '장애인'이 등장했다. 순위를 따졌을 때, 장애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키워드의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후보가 5명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증가 값은 50여 개에 불과해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대 대통령선거의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약 두 달간의 짧은 후보 검증 기간, 직전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다당제 구도, 기존 행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중심으로 되었던 19대 대통령선거는 '절대다수'의 관심사에 주목했다. 특히, 산업과 교육, 안전 등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에 비중을 두는 전략적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였다. 때문에'소수자'로 일컫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의 비중이 줄었다.

18대 선거에서는 비교적 상위 20위권에 가까운 22위에 장애인이 등장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급되어 기시행한 장애인연금제도, 성년후견인제도를 넘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새로운 장애 이슈가 출현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특수교사 확충, 문화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 이슈가 공론화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18대 선거에서 장애 담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8, 19대 표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애 담론의 빈도 순위는 28위이다. 주제어 전체 기준으로는 낮은 수치일 수도 있으나, 특정 계층을 나타내는 주제 기준으로는 높은 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애 관련 공약은 대통령선거 중 무시할 수 없는 의제임을 알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표 4-2〉 18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지역	200	지역	232
2	교육	191	교육	219
3	일자리	171	일자리	206
4	문화	166	문화	178
5	행복	160	산업	173
6	산업	158	경제	143
7	소득	148	개정	143
8	서비스	145	보장	137
9	필요	145	체계	137
10	예산	144	고용	136
11	체계	143	중소기업	134
12	복지	136	보호	127
13	고용	136	복지	121
14	개정	127	서비스	118
15	보험	121	건강	117
16	환경	110	의료	115
17	생활	107	협력	107
18	육성	107	관리	106
19	여성	105	육성	104
20	장애인	104	도입	99
28			장애인	83

18대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 체계를 제언하였다.

"장애인들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대폭 늘려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를 제공하겠다."

이를 정리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와 특수교사 확충,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당선인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법률 제정을 공약한 점,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점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낙선한 문재인 후보는 고용평등법, 교육복지법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을 공약한 점,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낮은 점을 비추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비중이 높았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약집 한쪽당 '장애인'을 주제로 한 비율에서 박근혜 후보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림 4-1〉과 달리 〈표 4-2〉에서 박근혜 후보의 상대적 관심도가 더 높기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19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일자리	126	노동	279	산업	231	계획	187	지역	112
2	도입	83	지역	261	지역	141	과제	173	교육	107
3	산업	83	보장	212	조성	129	개정	170	청년	86
4	기업	71	도입	200	문화	121	국정	166	도입	86
5	보장	56	삶	190	마음	98	교육	164	기업	67
6	지역	56	교육	161	관광	95	문제점	161	안전	59
7	고용	56	산업	155	도시	92	관리	144	개발	57
8	참여	43	기준	143	육성	91	환경	131	운영	56
9	청년	41	고용	132	해양	81	도입	105	보호	55
10	임금	41	건강	131	교육	79	문화	101	소득	54
11	성장	39	안전	130	미래	74	산업	100	시설	50
12	활성화	39	소득	129	기술	70	안전	98	서비스	48
13	보호	38	보험	128	개발	69	기술	95	취업	47
14	강화	38	의무	126	체계	68	서비스	89	산업	47
15	조성	37	경우	122	활용	65	보장	84	문화	46
16	체계	35	복지	118	여성	65	임금	84	일자리	45
17	적용	34	위원회	116	경제	64	인권	78	기술	42
18	비정규직	33	관리	115	장애인	63	지역	78	체계	42
19	중소기업	33	문화	112	교통	62	보호	70	활성화	40
20	개발	33	서비스	111	의료	57	고용	69	보험	40
	장애인 (등외)	2	장애인 (38)	87			장애인 (45)	51	장애인 (50)	28

VOICEYE
voiceye.com

19대 주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공약화하였다.

"장애인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요예산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영구임대주택 등 장애인 가구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겠다."

즉, 장애등급제 폐지 혹은 개선(대체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 장애인 주거보장과 같은 공통적인 공약이 있었다.

당선인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주제어 빈도수가 낮았음에도 연이은 대선 참여로 높은 인지도 구축한 점,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된 선거로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에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과 뉴스·선거·재난 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등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공약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두드러진 점과 같은 요인들이 당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 중, 유승민 후보는 당선인이 공약한 장애인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기획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춘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21.6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부가급여을 8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 공약, 경증장애인의 추가비용 12.1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을 4만원 인상하는 장애수당 공약과 같이 구체적인 연금·수당 인상 공약이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여성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 자립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장애여성 공약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전문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2.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애인 정책 주요 단어와 주제

1)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4〉 18대, 19대 전체 후보 공약 중 장애인 공약 상위 빈도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서비스, 의료, 보장, 활동, 제정, 폐지
2	교육, 건강, 방송, 소득, 보험료
3	복지, 보장, 공급, 주택
4	주거, 기준, 부양, 맞춤, 급여
5	소득, 보장, 도입, 연금, 권리, 기초
6	체계, 문화, 보장, 구축, 고용, 교육

〈표 4-4〉는 18,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의 정책 자료집 데이터를 종합하여 주제 단어를 도출한 결과다. 주제명은 〈표 4-4〉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분포를 보고 연구자가 설정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 공약 등 장애 정책 담론을 활용해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제명을 정하였다.

〈표 4-5〉 18, 19대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장애인 관련법 제정과 장애 등급제 폐지, 의료서비스 보장
2	특수교육과 방송접근권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3	임대주택(탈시설 지원 포함),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공급 확대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주거급여 확대
5	기초 생활보장과 장애인 연금 확대
6	문화향유권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주제 1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 제정, 다양한 지원의 구조적인 한계를 주는 장애등급제 폐지, 재활 등 건강관리에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관련법 제정은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

VOICEYE
voiceye.com

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의료서비스 보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도입,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대 등이 있다.

주제 2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접근권 확대, 의료이용 제한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등이 있다. 방송접근권 확대는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TV와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의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 수어 및 화면해설 비율 확대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하위 15% 가구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주제 3은 장애인 주거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대주택 확대는 공공임대비율 확대 및 장애인 특별분양 활성화와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등과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탈시설 지원도 포함되어 구성되어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는 시외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단계적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확대 등이 있다.

주제 4는 복지사각지대를 조성하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장애인 등의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주거급여 확대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서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와 지급액 월평균 20만 원으로 인상 등이 있다.

주제 5는 비수급 빈곤위협층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는 대상자 5% 수준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이 있으며, 장애인연금 확대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연금지급액 인상 등이 있다.

주제 6은 사회취약계층의 문화복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 장애인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문화향유권 확대는 거점별로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 시각장애인 점자 자료 지원, 장애인예술회관 등 창작 공간 지원, 전문예술교육 실시 등이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정보역량 강화교육,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이 있다.

주제명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분야에서 다뤘던 장애인 관련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 탈시설 지원,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관련법 제정의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화두이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40년 이상 장애인복지를 규정함에 따라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작동이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장애계 요구에 발맞춰 최근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의 경우, 기존 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하도록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절차를 밟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올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폐지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후 예산에 맞춘 점수제(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로 교체되었을 뿐 여전히 장애인 중심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된 후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일부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시간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이 필요할 것이다.

탈시설 지원의 경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이슈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자립지원 이행은 핵심과제이며, 최근 정부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정책이 점진적이고, 탈시설의 의지가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 장애인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장애계와의 합의점을 찾아 탈시설 정책 구체적 수립 공약이 필요하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증진 정책 내에서 개선요구가 많은 이슈 중 하나이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화와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점, 확대되더라도 이용 효율이 높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점 등으로 인해 공급 확대가 더딘 실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모빌리티와 같은 운송 영역을 형성하는 등 막대하게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공약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18대 대통령선거부터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시대의 장애인 의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VOICEYE
voiceye.com

2) 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6〉 18대 주요 대선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박근혜		문재인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기준	20	교육	23
2	보장	20	보장	19
3	서비스	18	서비스	18
4	기초	17	문화	16
5	계층	15	복지	15
6	생활	14	지역	15
7	소득	13	취약	13
8	급여	13	계층	12
9	체계	12	주거	12
10	수급	10	의료	11

박근혜 당선인은 기준, 보장, 서비스, 기초, 계층, 생활 등이 주제어로 나왔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보장·기초·생활·급여·체계가 구성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의료, 교육, 주거급여의 부처 간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관정책에 대해 연계와 통합을 하여 생활영역별, 정책대상별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급권 보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근본적인 빈곤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재인의 경우 교육·보장으로 구성된 '특수교사 정원확보 등 교육권 보장', 문화·복지·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 기본권 확장'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특수교사 정원확보와 특수학교 또는 학급의 신증설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취약계층 좌석 할당제 추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복지 기본권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도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4-7〉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장애인 공약 토픽 모델링 구성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급여, 서비스, 기초, 생활, 체계, 보장, 해소, 맞춤
2	의료, 보장, 적용, 등급, 이동권, 건강, 부담
3	기준, 소득, 수급, 기초, 부양, 보장, 생활
4	문화, 재활, 접근성, 체육
5	교육, 보장, 대상자, 생활, 발생
6	특수, 학생, 교사, 증가
7	보험, 건강, 진료, 보장, 환자, 중증, 부담

〈표 4-8〉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체계 강화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4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개선
6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
7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주제 1은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체계를 재설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2는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 재활프로그램 확충과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3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기초공제와 재산유형별 환산율과 같은 소득 환산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4는 문화예술, 스포츠강사의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등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5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와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

VOICEYE
voiceye.com

소통, 문화·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를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6은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사 증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7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진료)와 기초생활보장이 포함된 주제어가 두 가지인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고 진료비 지원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교육권·문화권·의사소통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중심으로 공약했다.

3)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분석 결과

〈표 4-9〉 19대 주요 대선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서 추출한 상위 빈도 단어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순위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주제어	빈도수
1	서비스	11	보장	26	복지	9	서비스	11	서비스	10
2	소득	9	급여	16	소득	8	교육	10	도입	7
3	센터	8	건강	14	기준	7	급여	8	맞춤	6
4	시설	7	부양	13	보장	7	주거	8	문화	6
5	교육	6	기준	13	발달장애	7	복지	7	건강	6
6	구축	6	소득	11	계층	6	기준	7	센터	5
7	임대주택	6	폐지	11	기초	6	소득	6	훈련	4
8	보장	5	주거	11	생활	5	가족	5	생활	4
9	의료	5	의료	11	단계	5	맞춤	4	교육	4
10	맞춤	5	여성	10	시행	5	시설	4	민간	4

문재인 당선인은 서비스, 소득, 교육, 보장, 의료 등이 주제어로 나왔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서비스·구축·맞춤이 구성되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등 장애인과 연관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상정의 경우 보장·여성이 구성되어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성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장애친화적 산전산후서비스 도입, 장애인가족 자녀양육학습도우미 제도 마련 등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승민의 경우 복지·발달장애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대 지정, 발달장애 주치의 제도 시행, 발달장애인 보험적용 항목 대폭 확대 등 발달장애인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철수의 경우 서비스·교육·복지로 구성되어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이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 무료 제공,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홍준표의 경우 맞춤·센터·훈련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경북권과 호남권에 맞춤훈련센터 추가 설립,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 매년 1,500여 명의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배출,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4-10〉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장애인 공약 토픽 모델링 구성 단어

주제 연번	주요 단어
1	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영구
2	기회, 대학, 균형, 지방, 선발, 정원
3	방송, 미디어, 센터, 접근권, 해설, 자막
4	고용, 중증장애인, 급여, 연금
5	서비스, 공단, 시설, 지자체
6	서비스, 재활, 구축, 교육, 맞춤, 의료
7	환경, 탈시설, 조성, 주거, 보장, 폐지

VOICEYE
voiceye.com

〈표 4-11〉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장애인 공약 주제명

주제 연번	주제명
1	임대주택 장애인 가구 우선 공급
2	대입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3	방송접근권 확대와 미디어 복지 강화
4	고용 활성화 정책과 장애인 연금 확대
5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체계 구축
6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7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정착생활 환경 조성

주제 1은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2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대학 입시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3은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 환경 마련, 지역미디어센터 장애인 공간 확대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미디어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4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5는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6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돌봄·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7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

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을 통해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대입, 미디어, 고용, 활동, 의료 등 다분야의 주제어가 분포된 것을 보면, 장애인과 연관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욕구와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약했다.

3. 당선자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를 〈표 4-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2〉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

연번	주제명	이행 정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부 이행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체계 강화	미이행, 부분 이행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부분 이행
4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전부 이행
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개선	전부 이행
6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	부분 이행
7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부분 이행

주제 1의 공약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수급자는 167만 명, 개정 전인 132만 명과 비교해 35만 명이 늘어나 정부의 기존 목표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환산 등의 문제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제 2의 공약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 장애인 관련 법 제정은 모두 제정 검토 또는 단계적 입법 추진으로 후퇴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은 2016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험사업 추진, 2017년 상반기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하며 부분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예산 증액으로 재활프로그램 확충

VOICEYE
voiceye.com

및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장애인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실시하며 부분 이행했었다. 그러나, 최초로 지방의료원 폐원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호텔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역행하는 행보를 걸었다.

주제 3의 공약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 재산기준 완화를 하며 부분 이행했으나, 주제명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주제 4의 공약은 2014년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 등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을 했다.

주제 5의 공약은 2015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8월 시행되었다.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제 6의 공약은 201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라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원 증원 등 부분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 현황 자료에서 보면 2013년 58.6%에서 2015년 4.2%로 소폭 올랐으며, 매년 11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해 특수교사의 증가율은 적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제 7의 공약은 3대 비급여의 일부 개선으로 축소하여 부분 시행되었다. 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은 미이행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를 〈표 4-1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3〉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과 실제 이행도

연번	주제명	이행 정도
1	임대주택 장애인 가구 우선 공급	우려 진행
2	대입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우려 진행
3	방송접근권 확대와 미디어 복지 강화	진행 중
4	고용 활성화 정책과 장애인연금 확대	우려 진행
5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체계 구축	우려 진행
6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우려 진행
7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정착생활 환경 조성	우려 진행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전부 이행에 가까운 공약은 '진행 중', 부분 이행에 가까운 공약은 '우려 진행'으로 표기하였다.

주제 1의 공약은 공공임대주택이 2016년~2019년 32만 8000호가 증가했으며, 2020년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0만 호,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 임대 등의 주거유형 비중은 작아 장애인 주거 대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 2의 공약은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 전형 의무화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외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봤을 때 세부적인 공약이 더 적극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 3의 공약은 한국 수어 방송·외국어 자막방송 지원으로 재난 정보제공 확대, 전국 17대 지자체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상파 뉴스, 정부 브리핑과 뉴스특보에 수어 방송을 실시하였다. 단,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세부적인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4의 공약 중 장애인연금은 2018년 25만 원 인상, 2021년 10월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장애인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제고는 높게 이루었으나, 장애 근로자 중심의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의 세부적인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5의 공약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까지 11개 시도에 설립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해 3개 시도가 선정됨에 따라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공약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 6의 공약 중 의료지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운영,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어린이재활의료센터 확충 등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하였으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더딘 실정이다. 2019년 7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행 이후 2021년 6월까지 주로 경증장애인이 속한 상위 1~6구간에 포함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무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2022년 예산도 650억 원이나 삭감되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임기 내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OICEYE
voiceye.com

주제 7의 공약 중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 7월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탈시설 지원의 경우,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어 탈시설 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의 격차도 컸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약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시설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별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춘 공약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공약의 비중과 주요 공약, 당선인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공약 대비 장애인 공약의 비중은 전체 평균 6%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18대 대비 19대 대통령선거 때 비중이 줄었다. 선거 대수별 수치상 차이는 존재하나 취약계층 공약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별 장애인 주요 공약을 규명하였다. 18대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수급권 보장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빈곤 해결에 초점을, 문재인이 교육권과 문화복지 기본권,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19대는 문재인 당선인이 맞춤형 지원체계와 연관 서비스의 질 향상, 심상정이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확립, 여성 모성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은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안철수는 데이터 복지 보장과 미디어 서비스 확대에 중심을 두었다. 홍준표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당선인의 공약 이행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18대 박근혜는 이행 정도가 전부 이행 3, 부분 이행 4, 미이행 1로 비교적 높은 이행 수준을 보이나, 세부 사항을 살펴볼 때, 빈곤 사각지대

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공의료 강화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축소 시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19대 문재인은 임기 중인 점을 고려해, 미이행을 표기하지 않고 우려 진행 6, 진행 중 1로 나타내었다. 공공성 강화 발표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부진한 이행 정도, 세부 공약의 미이행 등 전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려웠다.

2.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공약 제언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제가 형성되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적 부담 감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맞춤형 지원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주요 의제였으며, 이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장애인 현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국가정책의 장애 포괄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의제를 제언한다. 장애계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담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다. 이에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방안, 예산(장애인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등)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장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 개별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화에 관한 담론을 공약으로 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해당 담론은 활동 지원 시간 감소, 조사 문항이 장애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즉, 새로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모델에 입각한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장애인 자립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으로 탈시설 지원에 관한 의제를 제언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자립지원 이행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 42호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발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상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 정비를 통한 핵심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 증진 역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전국 시내버스 저상화와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감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동권 구축을 위한 유니버

VOICEYE voiceye.com

셜 운송 수단을 도입하고 효율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약이 논의되어야 한다.

3.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대통령 선거 중 발간되는 공약자료집을 분석해 주제를 명명하고 이를 분류하여 장애인 공약의 비중과 주요 공약, 이행정도를 살펴보았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방식의 사례연구나, 인터뷰, 담화를 넘어 데이터를 융합한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것에 의미가 크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이념을 넘어 명확한 데이터와 제언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득표를 위한 장애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해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의제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에는 어떤 담론이 있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통령선거의 공약 이행 정도에 관한 주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견이 명확히 반영된 정책 실현 여부를 살펴 단발성 공약이 아닌, 실현되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 전반에 관한 장애인 의제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를 넘어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지역별 담론을 살펴 장애 현안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와 제언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발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제 분석과 함께 공약을 예측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최근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시혜적 관점을 넘어 장애인도 대한민국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약의제가 나오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4(2), 193-217.

국민의당.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권순성, 김재웅. (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28(3), 107-132.

김동영, 김진병. (2018). 빅데이터로 본 민선7기 지방선거의 의미. [Jthink] Issue Briefing(175)

김민호, 윤호열, 최상옥. (2021). 인공신경망 기반 자연어처리를 적용한 연도별 정책내용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IT신전략 (2018-2020)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8(1), 1-26.

김시진. (2019). 한국의 공교육과 정당의 정책 경쟁.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윤자. (202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정규, 정철. (2019). 특허 정보를 활용한 한국과 미국의 관광 관련 기술 동향 분석 -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3(1), 249-267.

남찬섭. (2007). 장애인 :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평가. 월간 복지동향, 110. 40-49.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 나라답게,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동성혜. (2019). 미국 대통령선거와 정치빅데이터 유용성 분석. 미국헌법연구, 30(2), 99-141.

민주통합당. (2012).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

바른정당. (2017).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박찬표. (2008).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7(2), 5-40.

새누리당. (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새누리당. (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송근원. (2006).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1-36.

안예지. (2020).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 및 토픽 분석: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명모. (2014).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 분석. 연구자료, 159-183.

유동철. (2005). 한국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1(0), 5-33.

유재호, 전의찬, 김하나. (2019).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동향 분석 - 한국기후변화학회지를 중심으로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0(3), 161-172.

이수경, 정상원, 김홍기, 염영희. (2011). 한국 간호학 연구주제의 사회 연결망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41(5), 623-632.

이종승. (2021).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교육복지 정책 언론 보도 분석: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종호, 허선영, 장후은. (2020).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트렌드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3), 260-271.

자유한국당. (2017).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

정의당. (2017). 노동이 당당한 나라,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지원, 이재민, 최소연. (2018).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언론에서의 장애인 노동의제 분석. 장애의 재해석, 48-100.

정회옥. (2018). 19대 대선에서의 공약과 유권자 행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45-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제17~19대. 선거통계시스템.

최미란. (2007).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장애인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허만섭. (2019). 대통령 후보의 은유적 메시지에서의 판타시아(시각성)와 에나르게이아(생동감) - 한국 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 수사학, 35, 155-196.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lei, D. M., A.Y.Ng, M.I.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 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Analysis of previous presidential candidates' pledges related to the disabled using topic modeling and prediction of next candidate pledges : Focusing on the 18th and 19th major candidate commitments

Shin WooCheol*·Kim EunChong·Lee JongSeung*****

In South Korea, the agenda for the disabled emerged as a discours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from the mid-1990s.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of modern democracy, is a very important process that makes it a living policy through fierce competition for pledges reflecting the trend of the times and ideological c 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 a macroscopic theme, "What is the pattern of pledge polic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We looked at the pledges for the disa bl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had not been studied, by topic m odeling, one of the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s a result of that, it was discovered tha t 'disabled'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pledges made by the vulnerable group referred to as 'minority,'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pledge of disabled had a signific ant effect on the election. After that, the entire pledge data were analyzed to search for

* Assistant administrator, Department of Cooperation,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 Ph.D. Student, Departments of Finance,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ence Auth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Policy, Master's degree

words that had a high frequency of use. As a result, the word ‘disabled’ ranked 22nd in t he 18th and 39th in the 19th. It can be seen that the figure has fallen relatively in the 19 th election, and it can be seen that due to the “short verification period” and the “ruling party judgment theory,” the election strategy focused on the “pledge for an absolute majo rity” that can win vo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opics (K) could be set differently acc 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election pledges, and the specific subject name could be set, and the pledge of the elected person and the actual degree of implementati on could be confirm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edict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about the policy of the disable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earch marks its significan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ext mining, a technique that amalgamates da ta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nother point of significance is the establishment of basal ground for political parties to reflect the desires of electorates from the analysis of tangi ble data, instead of previously practiced ideological approaches. It is hoped, from this res earch, that the future pledges in the area of disabled rights could ensure the pragmatic a pproach and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electorates experience, or ensure the rights of dis abled are provided to full extent, rather than pledges concocted in populistic approach a nd devised to garner votes.

Keywords : Topic modeling, Presidential election, Committees, Status, Discourse on the disabled